민주 기초단체장 공천 어떻게

광주 서·북·광산구 중 시민배심원 도입 유력

전남은 사고지구당 빼고 국민경선

공심위 구성·경선 방식 주말 가닥

민주당이 이번 주말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 방법과 시기에 대한 가닥을 잡을 전망이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중앙당에서는 광주와 전남지역 일부 기초단체장 경선에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한다는 입장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광주와 전남지역 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 늦어도 다음달 말에는 시작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광주**=민주당 광주시당은 오는 20일까지 공심위 구성을 마치고 광주지역 기초단체장 경선 방법과 시기를 가닥 짓는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광주지역 구청장 공천 방식은 국민참여경선이 유력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참여경선이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실시될 것인지 여론조사 방식이 될 것인지는 아직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경선 방법을 결정하는 공심위 구성도 관심사다. 전체 공심위원 15명 가운데 20%인 3명이 외부인사로 채워져야 하며 여성은 전체의 30%인 4명이 돼야 한다.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여부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다. 대상 지역은 1개 자치구에 2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복합 선거구로, 서구와 북구, 광산구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이 따로 있는 남구도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위해서는 2명의 국회의원이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북구의 경우, 강기정 의원은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이나 김재균 의원은 정당정치 및 책임 정치에 어긋난다며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역 정치권에서는 광주지역 기초단체장 경선 방법과 시기 결정이 다음 주로 연기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전남**=전남지역 기초단체장 경선 방법과 시기 결정은 다음주에나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우선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1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회동을 갖고 전남도당 공심위 구성과 경선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한다.

공심위 구성 인원이 15명으로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외부인사(20%)와 여성(30%)을 포함하려면 12명의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5명 정도의 양보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구 후보 경선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공심위원 자리를 포기하는 결정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전남도당은 이번 주말까지 공심위 구성과 경선 방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다음주까지 최종 경선 방법과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일단 경선 방법은 국민참여경선이 유력한 상황이다.

시민공천배심원제는 기초단체장이 비리로 자리를 비운 지역과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이 지역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김효석 전남도당위원장이 경선 방식 결정과 관련, 지역위원장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지역은 그리 많지 않을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선거부정감시단 발대 18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감시단 발대식에서 감시대원들이 공정하면서도 철저하게 단속할 것을 선서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예비후보 등록 시·자치구 왜 빠르나

인구 많아 선거운동 기간 늘려

군수·군의원은 다음달 21일

19일부터 실시되는 6·2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대상이 자치구와 시·군에 따라 각각 달라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18일 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일부터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의원, 자치구청장, 시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군수와 군의원 선거 출마자들은 다음달 21일부터 관할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특히 군 단위 전남도의원 출마자들은 19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지만 군수와 군의원 선거 출마자들은 한 달가량 늦게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남 22개 시·군 중 17개 군의 군수 선거 출마자와 군의원 출마자는 한 달 뒤부터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화순군의 경우 전남도의원 선거 출마자들은 19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군수 선거 출마자와 군의원 출마자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한 달 가량을 기다려야 한다.

이 때문에 군수 선거 입지자 중 정치 신인들은 '얼굴'을 알릴 기회가 주는 등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당내 경선을 준비중인 후보들은 경선 막바지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어 사실상 선거운동 시간은 10여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한 군수 출마 희망자는 "군수 선거 지역이 도의원 선거 지역보다 더 넓은 데도 선거운동 기간이 더 짧은 것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불평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도시지역은 농촌지역에 비해 인구도 많고 예비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을 늘린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중원의 결투'서 승부 난다

한나라·민주당 준비 상황과 승패 기준

민주, 수도권·충청권 고토 탈환 올인

6·2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은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갖고 있어 임하는 태도가 비장하다. 한나라당은 지난 4일 당직개편을 신호탄으로 사실상 지방선거체제에 돌입했으며, 민주당은 일찌감치 'MB(이명박)정부 심판론'을 내건 데 이어 개혁공천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승부가 갈릴 전망이다. 특히 '세종시 수정 공방' 탓에 중원의 승부는 막판까지 예측불허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정몽준 대표를 정점으로 정병국 사무총장, 남경필 인재영입위원장, 정두언 지방선거기획위원장 등을 포진시키는 선거 준비체제를 구축했다.

또 인재영입위원회가 지난 16일 첫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지방선거기획위원회도 17일 1차 회의를 하는 등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 인재영입, 선거기획 등의 업무도 본궤도에 올릴 방침이다.

당 내부에서는 수도권에서 2곳을 지키면 승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과 그렇더라도 서울을 빼앗길 경우 패배 논란에 휩싸일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있다.

이밖에 기초단체장 선거도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기준점 가운데 하나다. 한나라당은 민선 4기에서 전국의 230개 기초단체 가운데 서울 25개, 인천 11개, 강원 18개를 싹쓸이했다. 경기도에서는 31개 중 30개에서 당선자를 냈다. 이들이 대부분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다시 출마하는 만큼 적어도 절반 이상에서는 승리를 거둬야 패배했다는 평가는 피할 수 있다는 게 당 내부의 판단이다.

◇**민주당**=금주 내로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방선거 체제로 조속히 전환해 3월 중순 텃밭인 호남을 시작으로 4월 중순 서울을 끝으로 공천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선거를 지휘할 선대위는 손학규 전 대표 등 당 내외 중량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매머드급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원의 고토를 회복, 호남을 제외하고 무너져버린 서부벨트를 복원해 내느냐 여부가 승패를 좌우할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현역들이 대부분 한나라당 소속이어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당내에서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최소 1곳씩만 탈환하더라도 의미 있는 성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2곳씩 이상 이기느냐 여부를 성패의 분기점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호남의 경우 무소속 후보의 돌풍을 어떻게 잠재우느냐가 성패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

'태풍의 눈' 세종시 수정 누구에게 유리할까

세종시가 6·2 지방선거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대립과 여권내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간 첨예한 갈등 속에 세종시 논란이 지방선거까지 이어져 최대 변수가 될 공산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와 친이, 친박 등 각 진영이 대국민 여론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18일 현재 수정안에 대한 지역별 여론의 흐름은 수도권은 찬성 여론이, 충청과 호남권은 반대 여론이 각각 높고, 영남권은 찬반 여론이 혼재해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수도권은 한나라당, 충청과 호남은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수도분할 불가'라는 논리가 먹히면서 여권의 서울시장, 경기지사, 인천시장 수성 전략이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역대로 지방선거가 '정권 중간심판론'의 성격을 띠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종시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 역시 만만치 않다.

세종시 문제로 현 정권과 각을 세우고 있는 충청권에서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당시 이 지역 단체장을 거의 휩쓸다시피한 한나라당의 패배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선거에 임박한 시점의 충청 여론이 관건이다.

민주당과 선진당은 이 지역에서 승리를 장담하고 있으나 이도 변수가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는 민주당의 승리가 예상되지만 한나라당 지지기반인 영남권에서는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의 활약상이 주된 관심사다. /연합뉴스